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2012누9231]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17233 판결

【변론종결】 2013. 6. 14.

【주문】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안과'를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수술인 국소적 결막절제술(regional conjunctiv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3. 3. 원고에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안과'를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수술인 국소적 결막절제술(regional conjunctiv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3. 3. 원고에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안과'를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수술인 국소적 결막절제술(regional conjunctiv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개발

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3. 3. 원고에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